

금감원, 우리·기업銀에 라임 투자손실 65~78% 배상 결정

파인애플뉴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3명에 대한 배상 비율을 65~78%로 정했다. 분조위 상정 3건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다.
1)투자성향 확인 없이 펀드가입 결정 후 공격투자형으로 변경, 2)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은 설명없이 안전성만 강조, 3)과도한 수익 추구 전략으로 다수의 피해자 발생에 근거

한국씨티은행이 매물로?...잠재 후보로 거론되는 OK·DGB금융

한국경제

매물로 나온다는 전제 하에 OK금융은 은행업 진출을, DGB금융은 수도권 거점 확대를 꾀하는 전략에서 인수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DGB금융은 수도권 거점 확대를 꾀하는 전략에서 인수전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

김정태 회장, 하나금융 1년 더 이끈다

서울경제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24일 후보자 심층 면접을 거쳐 김 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김회장은 연임 의사 밝히지 않았지만 유력 후보군이 사법 리스크에 노출된 상태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안정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 것에 기인

'파킹통장' 먹혔다...케이뱅크, 두 달만에 신규 100만명 유치

한국경제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최근 가입 고객 300만명을 돌파했다. 대출 영업을 재개하기 직전인 지난해 6월 말 기준 135만명이었던 고객이 약 8개월 만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가입자 증가 속도가 빨라진 배경에는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 파킹통장 '플러스박스' 등 신상품이 자리하고 있다.

1월 주식·회사채 발행 15조...전월대비 12% 상승

아시아경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1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을 보면 국내 기업의 1월 주식과 회사채 발행액은 15조4723억원으로, 전달보다 12% 증가
주식발행은 계절적인, 전월 대규모 유상증자 쏠림현상으로 40.8% 감소, IPO는 11.1% 감소했으나 회사채발행액이 전달보다 28.1% 증가

증권위 `불법공매도` 해외금융사 10곳 적발...6.85억원 과태료

이데일리

증권위는 해외 소재 금융회사 등으로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국내 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해 무차입 공매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밝혀
이에따라 증권위는 자본시장법상 무차입 공매도 금지 등을 위반한 해외 소재 금융회사 10개사에 대해 과태료 총 6억 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한화생명, '제판분리'에 위촉직과 갈등... 해결책은?

서울파이낸스

보험업계에 따르면 청원인은 판매자회사 출범으로 설계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청원게시판에 입장을 내비쳤다.
해당 회사는 한화생명으로 오는 4월 자회사형 GA를 출범시킬 예정. 이에 소속 설계사들이 이동에 따른 보상으로 5년간 급여 보장과 위로금 지급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

"혁신도 좋지만"...토스증권 MTS 써봤더니

뉴스웨이

내달 초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토스증권이 '주린이'(주식+어린이) 맞춤 모바일트레이딩 시스템(MTS)을 선보였지만 투자자들의 사이에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혁신'과 '편의성'을 내세운 토스증권답게 차별화되는 다양한 서비스가 눈길을 끈 반면, 기본적인 시장 지수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 제공되지 않는 점은 불편 사항으로 언급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